도마위 오른 이명박 정부 실용외교

‘독도 뒤통수’… 물건너 간 ‘新한일관계’

日 독도 언론 플레이로 한국 농락

외교 분야 총체적 무능력 드러나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의 명기 문제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외교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미국과의 쇠고기 파동, 중국의 푸대접 논란, 일본과의 독도 문제 등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정책이 곳곳에서 비상벨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일본 정부에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말 일본을 방문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자”며 일본 친화적 입장을 내세우면서,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노무현 정권과 대비되는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당시 재일동포들과의 리셉션에서 “나는 일본에 대해 만날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며 “(일본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해야 진정한 사과지, 억지로 한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지난 14일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결국 강행함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더구나 이번 일본 정부의 방침은 2개월 전인 지난 5월에도 일본 언론에 보도됐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외교 분야의 무능력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철저히 농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5월부터 잇따라 일부 자국 언론에 독도 영유권 관련 보도가 났을 당시 우리 당국자들의 경위 파악 요청에 ‘적절하지 못한 보도’라거나 ‘일본 정부의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최고위층을 포함한 모든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적절한 처신’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데 그쳤으며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행할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명기 이후에도 언론 등을 이용, 교묘하게 한국 정부 농락하고 있다는 것이 정관계의 분석이다. 요미우리 신문의 이대통령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일본 외무성이 공식 부인하긴 했으나 결국 한국 정부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15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 발표와 일부 언론의 관련 보도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정확한 경위해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최근 일본 정부가 보인 일련의 행위에 매우 불쾌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행함으로써 파문의 원인을 제공해놓고 이 화살을 교묘하게 한국 내부 요인으로 돌리려는 일본 측의 교묘한 언론플레이는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가 낙제점을 받는 것은 근본적인 외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외교정책을 총괄할 콘트롤 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교 분야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기술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을 방문한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오른쪽). 권 대사는 야부나카 미토지 사무차관을 만나 일본측의 처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 여야 ‘요미우리 보도’ 공방

野 “보도 사실이라면 탄핵감”

與 “日정부 사실 아니다 발표”

여야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한·일 정상환담에서 언급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의해 보도된 독도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거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로부터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겠다는 통고를 받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는 요미우리신문 보도가 불씨였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제의 보도를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이는 자기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옆집 사람이 등기하겠다고 하자,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며 “무엇을 왜 기다려달라고 사정했어야 했는지 저간의 사정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완곡한 어법이지만 이 대통령을 향해 헌법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면 공격에 나선 셈이다. 한 측근은 “헌법위반 부분은 초안에 없었다가 연설직전에 긴급히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나아가 ‘탄핵감’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사실이라면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영토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자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치권의 풍토가 너무 경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당의 대변인이 인터넷에 나온 것을 갖고 확인 절차도 없이 말을 바꿨다고 논평을 내놓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일본 정부도 요미우리 신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야, 日에 항의 방문단 파견

여야 등 정치권은 15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강행 사태를 놓고 총력 규탄태세에 들어가는 한편 국회 차원의 ‘독도 수호 및 역사왜곡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일본에 항의 방문단을 파견키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파렴치한 이야기”라며 “일본이 다시 독도 침탈을 작정하고 나선 데 대해 정부 당국이 강력히 대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발표는 명백한 영토 주권의 침해사건”이라고 거들었다.

야권도 명백한 영토주권 침해이자 역사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용한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이 장기적으로 기획·음모하는 부분을 간파하고 거기에 걸맞은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또 “이거야말로 등신외교”(송영길 최고위원), “캠프 데이비드에서 골프카트 대리운전으로 쇠고기 협상하고 일본에서는 미래지향을 말하다가 독도로 반응이 나왔다”(박영선 정책위 부의장)며 현 정부의 외교적 미숙을 성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특별기고

서영진

독도… ‘두 얼굴의 일본’

역사 속에서 보면 한일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들락거려 왔다. 일본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 지도요령’에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는 의미로 개정해 온 국민이 뿔났다. 앞으로 두 나라관계는 냉탕이 아니라 ‘살얼음판’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

지난해는 ‘조선통신사 400주년’의 해였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후 조선과의 화해를 위해 일본측 요청으로 1607년 처음 파견된 조선통신사는 우리들의 앞선 문화를 일본에 전파했고 양국의 선린관계에 큰 역할을 했다. 통신사는 1811년까지 모두 12회 파견했는데 이때가 두 나라 사이에 가장 ‘평화로운 때’였다고 일본학자들도 평가한다.

그 400주년을 맞은 지난해 일본열도는 통신사가 거쳐 간 고을마다 기념행사와 퍼레이드를 재현하는 등 열광이었다. 통신사를 ‘원조한류(元祖韓流)’로까지 치켜세우던 그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만들자”는 이명박대통령의 발언이 아직 귓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뒤통수를 치고 나온 일본의 저의는 뻔하다.

G8정상회담의 성과도 뚜렷하지 못하고, 20%의 지지도에서 헤매는 후쿠다수상의 상황반전과 독도문제에 대한 자민당 강경파의원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은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국토주권을 넘보는 일본의 몰염치는 대일항의, 주일대사소환, 일본대사관앞 촛불집회나 시위로 해결될 일도 아니고, 되지도 않을 것이다.

“한일간 독도문제는 한국국민은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은 20%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독도문제에 관심있는 일본인은 대부분이 전문가입니다. 100%에 가까운 한국인 가운데 독도문제에 정통한 사람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본의 오피니언그룹과 독도문제를 놓고 토론할 때 지한파(知韓派)일본인 학자가 내게 건넨 질문이다.

“독도문제가 터지면 한국에선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일본은 관심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우호적’이야기였지만 액면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일본인들은 집요한 점이 있다. 그리고 ‘전담부대’처럼 수는 적어도 전문가들은 강하다. 목적 달성을 위한 그들의 치밀한 전략과 전술에 아차하면 당하기 십상이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시마네(島根)현은 지난 2005년 2월 22일 독도가 자기네 행정구역에 편입된 100주년이라며 현의회에서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제정했다. 그리고 연구회나 포럼을 만들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고…. 현지 언론과 각종 이익단체 또한 집중보도와 정치권에 대한 압력을 넣었다. ‘독도수역의 어업권’을 놓고 제기한 지방어민들의 요구가 결국 ‘국가적 의제’로 끌어 올려놓은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일본·일본인들이, 한국·한국인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일본과 일본인들에 대해 얼마만큼 철저하게 연구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그리고 끈질기고 다양하게 대처할 전문가 양성과 조직화를 이뤄야 한다. 그러한 일들이 일본의 그것을 능가해야 한다.

두 나라 사이엔 오랜 역사만큼 깊은 골도 많다. 독도문제만이 아니다. 역사왜곡, 정신대, 재일동포참정권 문제 등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이번 ‘독도문제’는 ‘혼네(本音)와 다테마에(立前)-본심과 원칙이 다르다’는 일본의 두 얼굴에 대응할 장기적 방안을 낳는 산고(產苦)가 되어야 한다.

〈전 히로시마 총영사· 전 광주일보 주필〉